

지방에 기업·인재 유치해야... 中企업계, '3대 아젠다' 제안

중기중앙회, 공통과제 35개 제시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도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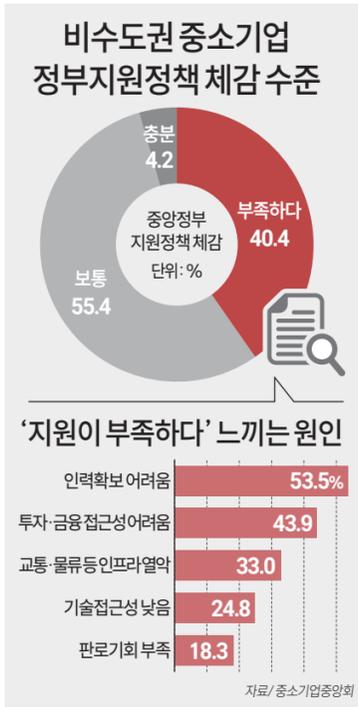
中企 40% "정부 지원정책 부족"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격차 느껴"

중소기업계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총 175개 공통·지역특화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여기에는 ▲리소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인적범위 확대 ▲지역 전통 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기업 정착을 위한 노후산단 입주업종 유연화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이 수도권 중소기업에 비해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저성장 및 활력저하, 인프라 부족의 '3중고'를 겪고 있고 양극화가 불평등을 넘어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재 지방 유입 촉진(8개 정책과제), 산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15개 //), 인프라 개선(12개 //)을 3대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통과제 35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도 발굴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계가 참여한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통합 지원 재정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부산울산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착공과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 강화, 경남지역에서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내놨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중소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전환 지원 및 고도화, 자동차 및 신소재 부품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세종지역은 다테크 창업밸리 조성 등 지역 창업·벤처 여건 개선, 충남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방정부 평가지표 개선, 충북지역은 오송바이오산단 내 바이오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는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은 지역 중소수퍼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운영지원 근거 마련, 인천지역은 산업용품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서울지역은 국내 최대 인쇄 산업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은 새만금에 중소기업 특화 RE100 산업단지 지정·지원, 제주지역은 제주형 LPG용기 순환사업 실시, 강원지역은 강원형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경영 격차가 6대4까지 벌어져 있고 실제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63%가 수도권과 경영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한 지방주도 성장이 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적극 반영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수도권, 비수도권 중소기업 772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인재 확보'와 관련해 가장 애로가 많다고 답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10곳 중 6곳(63.4%)은 수도권과 기업 경영환경 격차가 '크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99.5%)는 지방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CVC 1호 펀드로 희토류 공급망 구축

국내 희토류 분리정제 전문기업에
80억 투자... 안정적 원료 수급 확보
동남아 거점 원료 조달 체계도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중(重)희토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기술투자자와 함께 25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호 펀드를 조성하고 첫 번째 전략적 투자처로 국내 희토류 분리정제 전문기업에 80억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단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술 협력과 신사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운용은 포스코그룹 내 벤처투자 전문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두 회사는 미래 성장 전략과 연계 가능한 유망 기술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중희토류 원료 수급 체계 확보에 있다. 디스프로슘(Dy), 터븀(Tb) 등 중희토류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성능 영구자석의 필수 소재로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산과 정제는

일부 국가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돼 왔다.

이번 투자 대상 기업은 분리·정제부터 금속화까지 일괄 공정 역량을 보유한 국내 희토류 분리정제 전문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중희토류를 순도 99.5% 이상의 산화물로 분리·정제하고 이를 다시 순도 99.9%의 금속으로 환원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투자를 통해 중희토류 공급망 내 안정적인 원료 수급처를 확보하고 향후 사업 연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국내 투자와 함께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글로벌 원료 조달 체계도 다진다. 말레이시아 전문기업과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분리정제 합작사업을 추진해 환경 친화적 채굴

및 안정적 생산체계를 검증한 뒤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오스 희토류 분리정제 사업에도 참여해 동남아 전역으로 원료 조달망을 넓혀 나간다.

이를 통해 동남아에서 확보 가능한 희토류 분리정제 제품은 연간 약 4500톤, 현 국제 시세 기준 약 2억30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향후 추가 투자를 단행해 생산 능력을 1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동남아시아에서 확보한 원료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미국 현지 기업 리엘리먼트(ReElement)와 협력해 연산 3000톤 규모의 희토류 분리정제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2027년 하반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원관희 기자 wkh@

기보 민간 기술거래 기관 최대 400만원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 공동으로 중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료 규모에 따라 민간 기술거래 기관에게 건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성장 정체 '지역특구' 새로운 돌파구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이 정체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이중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의 악재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해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해 1500만원씩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LG엔솔, '전고체 배터리'로 로봇·UAM 체계 공략

2029년 '혁신계 전고체 배터리'
2030년 '무음극계' 상용화 목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내세우며 적용 시장 확대와 생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지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도심항공교통(UAM)체계까지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대량 생산과 안정성이 중요한 전기차 시장에는 '혁신계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2029년 상용화를 추진하고, 공간 제약이 크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 요구가 높은 휴머노이드 로

봇 등 차세대 애플리케이션과 항공용 UAM에는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음극계 방식은 이론적으로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로봇의 구동 시간과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단일 시장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산업별 요구 조건에 맞춘 세분화 전략을 꺼내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최대 장벽으로 꼽히는 것은 높은 제조 비용과 공정 복잡성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해결할 핵심 해법으로 건식전극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기용매 건조 공정을

을 생략하는 건식 공법은 설비 투자비와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 시간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도 배터리 생산 전반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건식전극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 450건 이상 출원하며 기술 리더십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산급 건식전극 제조의 핵심인 '건식전극 섬유화도 및 인장 강도 개선 기술' 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물질 입자 크기와 상관없이 양극과 음극 모두 적용 가능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적 난도가 높은 리튬인산철(LFP) 양극 건식공정까지 아우르는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한층 넓혀가고 있다. 전



LG에너지솔루션 전고체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격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건식전극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관계자는 "최근 로봇, UAM 등 신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상용화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